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과정과 성과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성인지 통계는 성평등 수준과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별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단위의 성별 통계 생산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고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해 지역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면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기관별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분산형 통계 제도는 필요한 통계를 관계 기관이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통계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통계 생산이 중복되기도 하며 통계 품질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통계에 대해 작성승인제도(「통계법」 제18조)를 도입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¹⁾는 공식 통계로서 각종 국가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며, 대부분의 양성평등정책 또한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추진·평가되고 있다. 성인지 통계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와 「통계법」 18조를 기반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우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성인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이행을 담보하는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서 성인지 통계 생산을 강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통계생산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1) 2024년 6월 4일 기준 국가승인통계는 총 1,331종이다.

2007년 「통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통계청과 협의하여 국가승인통계가 성인지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항은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은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거나 변경, 작성 중지 시 반드시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규정²⁾하여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이 가능하게 하였다.

2. 국가승인통계의 점검과정과 방법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011년 통계업무협력약정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계업무협력의 첫 출발은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은 신규 및 기존 국가승인통계를 구분하여 점검하기 시작했다.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점검과정을 살펴보면, MOU 이전 점검은 주로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과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였다. 2007년에는 1,003종의 국가승인통계 중 성별 분리가 가능한 802종에 대해 조사표의 성별 구분 여부를 처음

으로 파악했고, 2008년과 2012년³⁾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계법 시행 이후 성별 구분 수준을 파악하였다. 2014년에는 고용·임금과 물가·가계소비 분야의 통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임금 분야에서 진행되는 가구 위주의 조사 방식에는 배우자인 여성의 소득과 지출의 특성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물가·가계 분야에서 진행되는 가구 단위의 조사 방식에는 가구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이 동시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2022년에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뿐 아니라 결과표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점검을 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보건·복지 분야, 2017년에는 교육과 문화 분야, 2018년에는 정보·통신과 안전·폭력 분야, 2019년에는 기업경영 분야, 2020년에는 사회조사 분야, 2021년에는 노동 분야에 대해 성인지적 개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이슈 통계 중 성별직종분리, 이공계(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통계, 자산격차,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통계생산 방안을 검토하였고, 2023년은 「통계 생산자와 활용자」를 위한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를 개정하여 발간하였다.

한편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졌다. 국가승인통계 점검은 통계청이 승인 완료된 통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여성가족부에 제공⁴⁾하고, 여성가

2) 성별 구분에 대한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3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③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적 통계인 경우 성별 구분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처벌규정이 없어 통계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반면 「통계법」은 제18조를 어길 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으로써, 그 효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3) 2012년은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에 있어 성별 구분 실태의 점검방식을 문항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파악했다.

죽부는 이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신규 국가승인통계를 점검하여 양성평등 추진을 위

한 통계 개선 의견을 작성하고, 개선 의견은 통계청이 각 생산기관에 전달하여 수용 여부를 파악한 후 반영 상황을 추적 및 점검하였다.

〈표 1〉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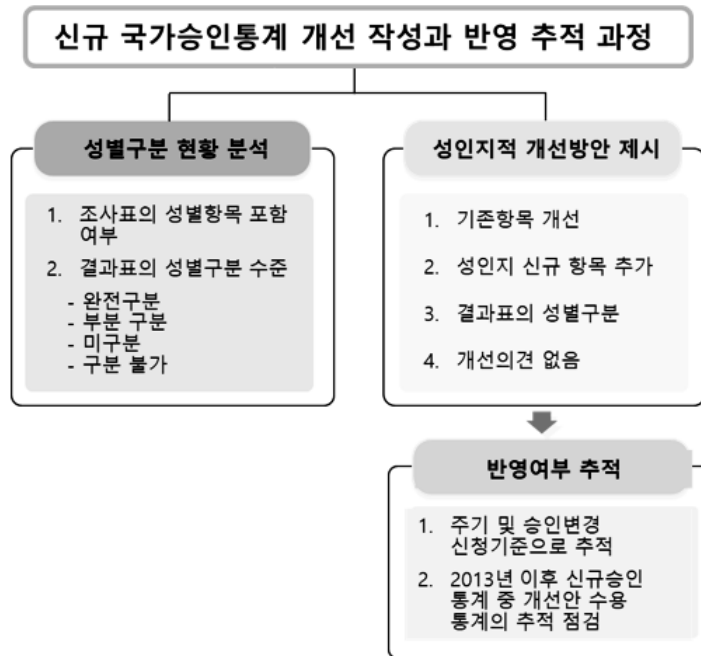
연도	신규 국가승인통계*	기존 국가승인통계
2007	-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
2008	-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
2012	-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 * 조사표를 항목별 점검 실시
2014	-	고용·임금 분야와 물가·가계 소비 분야
2016	2015년 신규승인통계 25종	보건·복지 분야 80종
2017	2016년 신규승인통계 44종	교육·문화 분야 46종
2018	2017년 신규승인통계 91종	정보·통신과 안전·폭력 분야 42종
2019	2018년 신규승인통계 78종	기업경영 분야 64종
2020	2019년 신규승인통계 76종	사회조사 103종
2021	2020년 신규승인통계 47종	노동 분야 36종
2022	2021년 신규승인통계 38종	주요 통계생산 방안 (성별직종분라, STEM, 자산격차, 플랫폼 종사자)
2023	2022년 신규승인통계 47종 점검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발간

* 신규 국가승인통계란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n-1에 승인된 통계를 의미함.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지적 점검은 조사표의 경우 조사 항목 개선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신규 항목 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표의 경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점검을 위해 필요한 통계표의 성별 구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점검 결과는 ‘조사 항목의 개선’, ‘신규 항목 추가’, ‘결과표의 개선’, ‘기타 개선’, ‘개선 의견 없음’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사 항목의 개선’은 조사 항목의 조사표에서 설문과 답항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며, ‘신규 항목 추가’는 조사표에 성인지 정책을 추

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를 의미한다. ‘결과표의 개선’은 결과표의 일부 혹은 모든 항목에 대해 성별 구분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타 개선’은 조사 항목, 신규문항 추가, 통계표 개선 등을 제외한 기타 조사표의 구성이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이며, ‘개선 의견 없음’은 성인지적으로 개선 사항이 없다는 의미이다. ‘개선 의견 없음’은 조사 내용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3항과 4항의 성별 구분 예외 규정에 포함된 경우, 조사 내용과 결과표가 성인지적으로 작성되었을 때 해당한다.⁴⁾

4) 2020년부터는 연구자가 나라 통계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narastat.kr/pms/index.do>)을 통해 직접 내려받아 분석하였다.



[그림 1]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작성 및 반영 추적

[표 2]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점검 방법

개선 방안 제시	개선내용
조사 항목 개선	조사 항목의 질문과 답항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청
신규 항목 추가	조사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항목의 추가를 요청
결과표의 성별 구분	결과표의 일부 혹은 모든 항목에 대해 성별 구분을 요청
개선 의견 없음	조사 내용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과 결과표가 모두 성인지적으로 작성된 경우

자료: 주재선 외(2018). 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p.5.

한편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현황은 통계작성의 대상과 항목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첫째, ‘성별 구분’은 대상 조사표와 결과표가 모두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에 대해 성별을 구분한 경우이다. 조사표의 경우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모두 성별로 구분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며, 조사 대상이 사업체 또는 기업체와 같이 자연

인이 아닐 때는 사업체 대표자의 성별(혹은 종사자 성별 등)을 통해 구분 여부를 판단한다. 결과표의 경우, 각 통계표의 전체값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 모두 성별을 구분한 경우를 말한다. 둘째, ‘부분 구분’은 조사 내용의 일부 혹은 결과표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성별을 구분한 경우이다. 조사표의 경우 조사 내용의 일부만 성별로 구분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

5) 주재선 외(2020). 2020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p.69.

표의 경우 전체값에 대해서 구분했으나, 세부 항목 일부만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성별 미구분’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사표에 성별 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성별을 구분

하여 조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결과표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한 것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구분 불가’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조사 및 항목일 때 해당한다.

〈표 3〉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현황 점검 방법

구분	단위	점검 방법
조사표	조사표 종별	성별 구분 항목 포함여부와 조사표의 종수로 평가 : 구분, 부분 구분, 미구분, 구분 불가
결과표	결과 통계표	결과표의 자연인에 대한 성별 구분 정도로 평가 : 구분, 부분 구분, 미구분, 구분 불가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6.

3.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성과⁶⁾

2011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협력관계로 출발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의 경우, 승인받은 통계에는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개선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오로지 통계 생산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점검은 개선안의 수용 여부와 이를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모두 점검해야 했다.

기관 수용은 기관이 개선안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며, 반영이란 기관이 수용한 개선안을 실제로 통계에서 수정·보완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영 건수는 개선안이 요구한 대로 수정될 경우만 포함되며, 해당 개선안의 항목 혹은 결과표가 삭제되거나 개선안과 다른 방향, 즉 성인지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경

우는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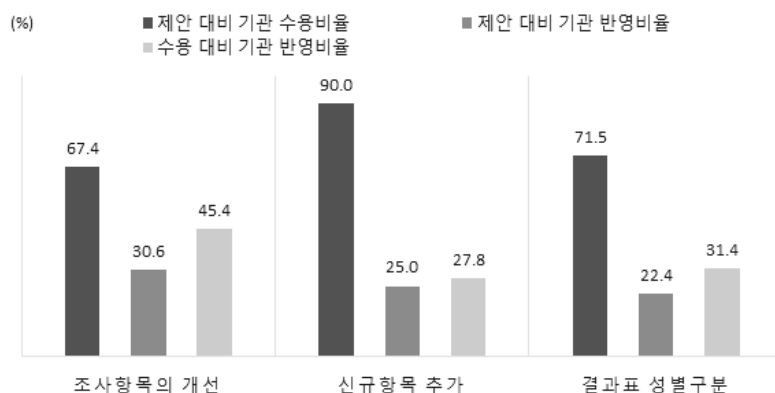
조사 항목 개선안에 대한 기관의 수용과 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21년 동안 제안한 개선 건수는 144종 258건이고 이 중 통계생산기관이 수용한 건수는 97종 149건이며, 실제 통계 개선으로 반영된 건수는 44종 59건이다. 개선 제안 대비 기관의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66.7%로 가장 높았고 2016년 60.0%, 2012년 48.7%, 2019년 31.3%, 2013년 28.6%, 2018년 23.5% 순으로 나타났고, 2021년은 수용된 개선안에 대한 반영 건수는 20.0%이다.

신규 항목 추가 제안은 2012년 5종 8건, 2013년 2종 4건, 2015년 1종 3건, 그리고 2016년에는 2종 2건이 있었고 2014, 2017, 2019년에는 신규 항목 추가 제안이 1건도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신규 항목 추가 종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

6) 신규승인통계를 제외한 기존 분야별 승인통계 점검은 개선안에 대한 반영 여부 점검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신규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 결과만 제시한다. 구체적 개선 결과는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부록 5〉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의 수용 및 반영 추적결과(2023년 11월 15일), pp.202~225 참조.

는 4종 6건, 2021년에는 6종 9건에 대해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신규 항목 추가에 대한 수용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2020년에는 3종 5건, 2021년에는 5종 8건을 수용하여 수용 비율이 75%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한편 결과표에 대한 성별 구분은 2012~2021년 동안 총 165종 3,533건에 대해 제안되었고, 이 중 118종 1,612건이 수용되었으며 2023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총 37종 429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137.

[그림 2] 2012~2021년 신규국가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한 수용 및 반영 현황

<표 4> 2012~2021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반영 현황

(단위: 종(건), %)

구분	조사 항목의 개선	신규 항목 추가	결과표 성별 구분
개선 요구 종수(건수)(A)	144 (258)	20 (27)	165 (3,533)
기관 수용 종수(건수)(B)	97 (149)	18 (27)	118 (1,612)
기관 반영 종수(건수)(C)	44 (59)	5 (6)	37 (429)
제안 대비 기관 수용 비율: $B/A \times 100$	67.4	90.0	71.5
제안 대비 기관 반영 비율: $C/A \times 100$	30.6	25.0	22.4
수용 대비 기관 반영 비율: $C/B \times 100$	45.4	27.8	31.4

주: 1) 기관 수용여부는 부분수용을 포함함.

2) 반영 종수(건수)는 2023년 10월 15일까지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승인 변경된 조사표와 결과표의 반영 종수임.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137.

4.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제언⁷⁾

여성가족부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신규 승인통계의 통계 개선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점검기준으로 조사 항목 44종 59건, 신규 항목 추가 5종 6건, 결과표 성별 구분 37종 429건의 개선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을 개선안에 대한 수용 비율과 비교해 보면 실제 반영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2021년까지 누적된 조사 항목 개선에 대한 기관 수용 비율은 67.4%이지만 수용한 개선안에 대한 반영 비율은 45.4%이다. 결과표는 더욱 격차가 커서 수용률은 71.5%이지만 수용한 개선안에 대한 반영 비율은 31.4%로 낮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생산기관 통계 담당자의 변경 및 부재, 기관의 통계 개선 의지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개선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더욱이 2022년 통계청과 함께 진행했던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통계생산 기관과의 관계 형성이 높지 않은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과 이행 점검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에 국가승인통계의 점검과 이행은 통계청, 통계생산기관, 연구기관의 이행 점검 체계를 재확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통계청은 제1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13~'17년)을 수립하면서, 기관별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가통계발전을 위해 성인지 통계생산 여부를 지속하여

점검하고 2014년 이래 공무원, 민간 통계작성 기관 종사자 등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해 왔다. 신규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통계·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제2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18~'22년)과 제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23~'27년)에도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와 추진과제로, 성인지 통계 개선 과제에 대해 ①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추진, ②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체 운영, ③ 관련 공무원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연차별 추진 일정으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과 수시로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 및 교육 시행 추진계획을 설정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가승인통계 개선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협의회 활동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협의체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검토와 협조체계 또한 중단되어, 국가승인통계의 개선과 협의회가 매우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여성가족부, 통계청, 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생산기관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여성가족부와 통계생산기관의 협력에 추진될 수 있으나, 통계청이 빠진 개선과 반영

7) 이 제언은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에서 제언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pp.138~141.

점검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관련법과 품질관리 등을 통해 승인통계를 성인지적으로 생산·점검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해 통계생산기관과 통계청,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이후 중지되었던 협의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승인통계의 개선과 이행 점검을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더라도, 통계청과는 정기적 협의를 통해 효과적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의 기관별 과제 내용에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공동으로 통계 개선을 하게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②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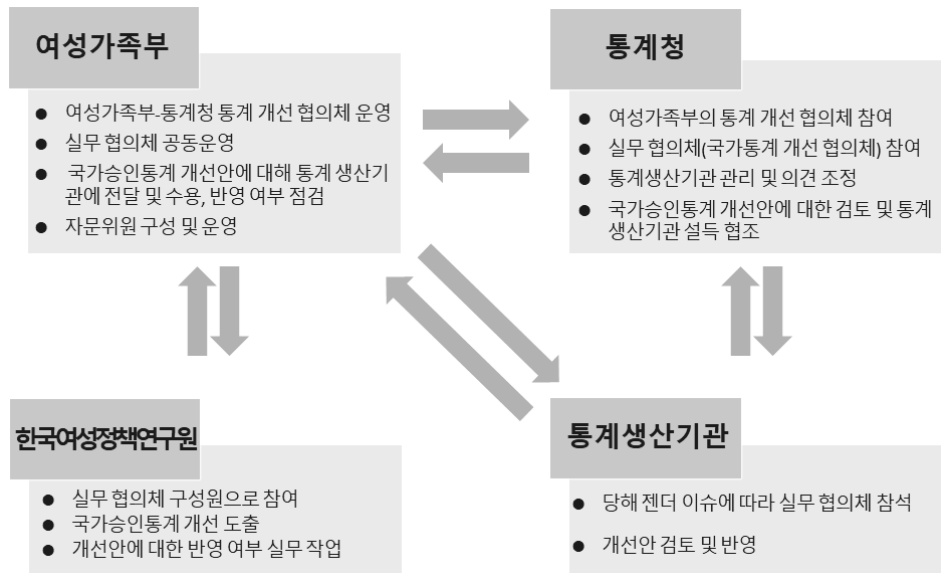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여성가족부는 2012년 이래 추진되었던 통계청과의 논의를 재개하여, 여성가족부의 통계생산에 대한 자문과 국가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단, 협의체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협의체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에서 생산되는 통계와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 폭력실태조사, 양성평등실태조사 등 16종의 승인통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2~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통계는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통계청과 이들 조사가 품질이 좋은 통계로 생산될 수 있도록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다양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승인통계가 성인지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논의되고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체는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승인통계 협조는 주기적 모임 안건으로 논의하면 되지만,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통계청뿐만 아니라 통계생산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개선안 작성, 생산기관의 협조, 반영 여부 점검 등 세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협력은 물론 통계생산기관의 협조와 연구기관의 개선안 도출 등이 함께해야 효과적 달성이 가능하다. 실무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담당과 담당자, 연구기관 연구자로 구성하며, 정기 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해 통계 개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협의체는 정기 모임으로 협의체가 처음 시작했던 당시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의 정기 모임을 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는 전년도 하반기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해당 연도 여성가족부 조사와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며, 하반기는 상반기 논의 사항의 추진 결과와 국가승인통계 개선과 반영 사항을 논의하면 될 것이다.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140.

[그림 3] 성인지 통계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역할

한편 실무 협의체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해야 한다. 분기별 계획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4분기는 (n-1)연도 신규 국가승인통계를 통계청과 공유하고 당해 연도 여성가족부가 통계생산 등에 대한 협조 사항을 통계청과 논의를 논의한다. 2/4분기는 (n-2) 연도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에 대한 통계생산기관의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필요에 따라 개선

협조를 위해 생산기관과의 개선 협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단, 2/4분기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온라인 회의로도 가능할 것이다. 3/4분기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해 통계청과 공유하고 통계생산기관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4/4분기는 2012년 이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기관의 반영 성과를 점검한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의 수시회의는 기타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필요시 갖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주재선·윤덕경·정성미·송치선(2018). 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주재선·김복태·송치선·양준영(2020). 2020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주재선·김복태·송치선(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